

#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방안 관련 전교조-인권단체 공동 활동 제안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장 이문석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방안 발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및 교사의 인권 유린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인권단체에 공동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 1.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발표 이후 상황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방안 발표 이후 고등학교에는 0교시 및 강제 보충, 강제 자율학습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 0교시로 불리우는 학생 조기등교 시간이 이제 -1교시까지 등장해 새벽 6시 대로 빨라진 학교가 등장했으며, 상당수의 학교들이 EBS 방송 청취 및 타 학교의 행태를 근거로 조기등교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 강제 보충 수업은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신청을 강요하여 희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금지하는 방침대로 0교시를 폐지한 학교들도 오후 및 야간 보충수업을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연속으로 진행해 무리한 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야간 자율학습 또한 정규 교육과정처럼 편성해 학생들이 밤 9, 10, 11시에 귀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또한,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중학교에도 보충수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조기등교(0교시), 강제야자, 야간보충은 학생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해서 밤 10시에 하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야자를 빠질 수 없어 야간에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있어 새벽 1시, 2시에 취침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잠잘 권리와 쉼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아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을 이용해 잠을 자 정규교육과정을 오히려 침해하거나, 야자시간에 남아 잠을 보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야자 및 보충의 강제시행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보충수업비 강제 거출 및 야자수당 마련을 위한 찬조금 거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강제 야자는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해 학생들의 문화·교육·자치 활동을 가로막고 오로지 입시준비교육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중학교 보충수업 확대 방침으로 인해 입시와 관계없는 중학생까지 입시교육의 희생자로 내몰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 세계 인권 선언 및 아동 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쉼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학생·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전교조는 파행적인 학교교육과정운동을 거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교육 개편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 그 동안 전교조도 “내 자식 대학 보내겠다는 데 누가 뭐라고 하나?”는 논리에 둘러 쫓

여있었고, 지방의 경우 사교육시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충수업의 저지가 역차별이라는 논리를 무시하기 어려웠기에 응성적으로 진행되는 파행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부분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데 그쳐왔습니다.

▶ 하지만 학교교육과정운영의 파행이 교육부에 의해 노골적인 지시되고 집행되는 현 상황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를 학원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공교육이 왜곡되고, 학생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과정이기에 거부와 대안 제시의 틀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합니다.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교육 개편안은 그 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입시구조, 대학개혁, 초중등교육과정운영 등 공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포괄할 예정이며 1차적으로 0교시, 강제보충 및 강제야자, 야간 보충, 보충 중학교 확대방안, 불법찬조금 거출을 반대하고 저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일정은 오는 3월 26일 파행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교사선언을 조직화 해 발표하고, 4월 중순까지 조치가 없을 시 교사들의 실천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 4. 학생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0교시, 강제 보충·강제 야자 및 중학교 보충수업 확대 실시” 저지에 인권단체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어 교육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불만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0교시 및 강제시행 단속을 말로만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학생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조직과 실천력을 갖고 있지 못해 교사, 청소년단체, 인권단체 등 함께 목소리를 내고 여론화 할 주체들이 필요하며 인권단체에 이 역할을 함께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장기적으로 학생의 인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공교육 개편운동을 함께 논의 할 것을 제안 드리며,

1차로 보충·야간자율학습 전면 부활을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의 성명서 발표를 제안드리고, 성명서 발표 후 가능하시다면 서명 운동 또는 학생인권지킴이 활동을 건의 드립니다.

▶ 이후 공동활동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길 희망하며 전교조의 학생인권활동과 공교육 개편 운동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4. 3. 24.

청소년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1. 지난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발표된 뒤, 청소년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학교에서 그동안 불법이었던 보충수업 및 (강제)자율학습이 합법화되면서 강제로 청소년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붙잡아 두도록 하는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심지어 EBS 방송 과외를 보는 시간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0교시도 모자라 -1교시(새벽 6시대에 등교)까지 만들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학교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보충수업도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미 한국의 연간 수업 시수는 OECD가입 국가의 평균 시수 935시간보다 훨씬 많은 1,254시간으로 세계최고이다. 이마저도 정규수업 시간으로 이 외의 보충수업과 아침, 저녁으로 행해지는 (강제)자율학습까지 합친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새벽에 나와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여가 시간뿐 아니라 수면 시간까지 대폭 줄어든 채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늦은 시간 귀가는 유해환경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도록 할 가능성이 높고, 보충 수업의 비용을 전액 개별 가정에 부담시키면서 또 하나의 사교육비를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 결국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해지는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수업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돌아올 인권침해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3. 물론 교육부는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의 강제 시행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자율성은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전교조 게시판(<http://moim.ktu.or.kr/eduhope/>)을 통해 올라오는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글에도 나타나듯이 말만 '자율'일 뿐 많은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강제'로 붙잡아 두고 있으며, 보충 수업 또한 '희망서'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만들어 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 또한 정규 수업 이외의 추가 근무를 강요당하게 되면서 급기야 지난 3월 26일에는 세원고 교사가 쓰러져 귀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다.

4. 교육부가 이번 '사교육 경감 방안'과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를 입시학원화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한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은 전면 중단,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가 정말 사교육 경감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청소년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또 다시 밤늦게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학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학교 수업만으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벌위주의 입시교육을 개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8일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원불교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장애인연맹



## 보 도 자 료

2004. 04. 12. (모두 03쪽)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문제 담당기자

발 신 : 김진숙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대표

구정인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권익신장사업부

796-2278, 019-495-1318

### 제 목 : **보충·자율학습 강제적 시행 중단, 0교시(-1교시) 수업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학생 단체 공동성명 및 대응방안 안내**

1.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뒤,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강제 보충수업과 강제야간자율학습, 0교시, -1교시의 강제적 시행으로 학생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시행된 대책방안은 학교 현장에서 불법적, 편법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의 고통과 불만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특히 각 교육청별로 강제적 시행을 막는 '세부지침'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엄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교들이 시정하지 않고 강제적 시행을 하고 있는 것에 분노합니다.
3. 학생들이 새학기 시작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갖가지 불법·편법 시행 사례들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게시판에 올리고 있으나 오히려 실명으로 게시하는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신고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청소년·학생 단체에서는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학생들을 대신해 불법적 시행을 하는 학교를 고발조치 하는 운동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자 합니다.

강제자율보충신고센터 : 1318virus.net

고발 내용 : 자율, 보충수업의 강제적 시행, 0교시 또는 -1교시 시행

4. 신고된 학교는 교육청에 청소년단체가 대신 고발 접수할 것이며 우리 청소년·학생 단체들은 각계 교육단체와 인권단체등과 연대하여 이후 조치와 관련하여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강제적 불법적 시행을 시정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첨부 : 강제자율보충 신고센터 웹페이지. 끝.

1318virus  
Young Independent News

강제자율보충  
신고센터



세상을 바꾸는 힘, 청소년에게 있다  
청소년독립신문 바이러스에서 기사를 모집합니다  
more>>

가화 | 문화 | 교육 | 우리들의 이야기 | 갤러리 | 토론실 | 바이러스TV | 남북뉴스

2004년 4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53분



신규회원 가입 환영회(9월 22일)

강제 자율보충 신고센터

1318virus  
Young Independent News

바이러스소개 | 기사신청 | 문의메일 | 사이트맵 | 이메일수집거부 | 개인정보정책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8 | 4층빌딩 3층

☎ 전화 : (02) 796-7001 ☎ 팩스 : (02) 796-2278 ✉ 이메일 : heemang@heemang21.net

## 보충·자율학습 강제적 시행 중단, 0교시(-1교시) 수업 폐지를 촉구하는

### 청소년·학생 단체 공동성명서

지난 2월 17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안을 발표한 이후 학교에서는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보충,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0교시 수업에 -1교시 수업까지 편성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사교육비로 부모님의 어깨를 부겁게 하는 것이 고통이고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방송에서만 수능문제를 내고,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방편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시행되면서 학교는 임시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혹은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5~17시간동안 학생들은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학원에 가서 새벽1시에나 집에 옵니다.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학원비, 저녁 간식비, 교재비등을 합치면 과연 사교육비가 줄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커녕 죄 없는 학생들만 죽어난다는 것이 학생들의 항변입니다.

학생들은 끼니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오랜 시간 좁은 책상에 앉아 있어서 허리병, 위장병, 두통을 호소합니다. 한밤중에 들어오고 새벽에 집을 나서는 학생들로 인해 가정에 단란한 시간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과연 모두가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공부 이외에도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 문화 체험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보장은 못해주더라도 그 시간을 빼앗지는 말아야 합니다. 21세기는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인간형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미약한 학생·청소년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부만 하라고 하루 종일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억누르고 시키면 무조건 따라오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감옥의 0.75평보다도 좁은 책상과 의자에서 하루 15시간 이상씩 앉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를 떠나서 인간이 물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행적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강제자율보충을 지도 감독하는 선생님이 과로사 하신 것을 보면 학생들도 이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하려는 일선교사와 이를 거부하는 학생사이의 갈등과 불신은 있어서는 안 될 사제 간의 폭력과 반목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학교에 대한 믿음이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됨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방안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을 더 키우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적인 대책은 학벌위주의 사회, 대학 서열 타파에 있습니다. 우리는 입시위주의 근본적인 교육 구조를 개혁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보장하여 공교육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 정부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하나. 0교시(-1교시) 수업을 폐지하라!

하나. 보충·자율학습 과행운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적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학교 보충수업 방안 철회하라!

하나. 학생·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권리를 보장하라!

전국민주 중고생 연합 /

(사)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청소년독립신문1318virus / (사)울산 청소년 교육문화 공동체 함께

MBC, 화제

### 사랑의 매? 끝나지 않는 체벌 논란

최근 학교 체벌과 관련된 극단적인 불상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 한 중학교의 보육교사가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체벌에 관련한 증언문제로 괴로움을 참지 못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 결국 체벌이 문제가 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이 된 체벌 문제! 실제 사건 당사자간에는 심한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꿀밤 두 대를 때렸다는 교사의 다른 주장으로 현재 고발상태.... 이 외에도 전국학부모회에서 지난해 벌인 학생 상담 중 42.8퍼센트가 교사의 체벌, 언어폭력 등 교사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3년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벼운 체벌이 허용된 뒤, 그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이 사법적인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본다